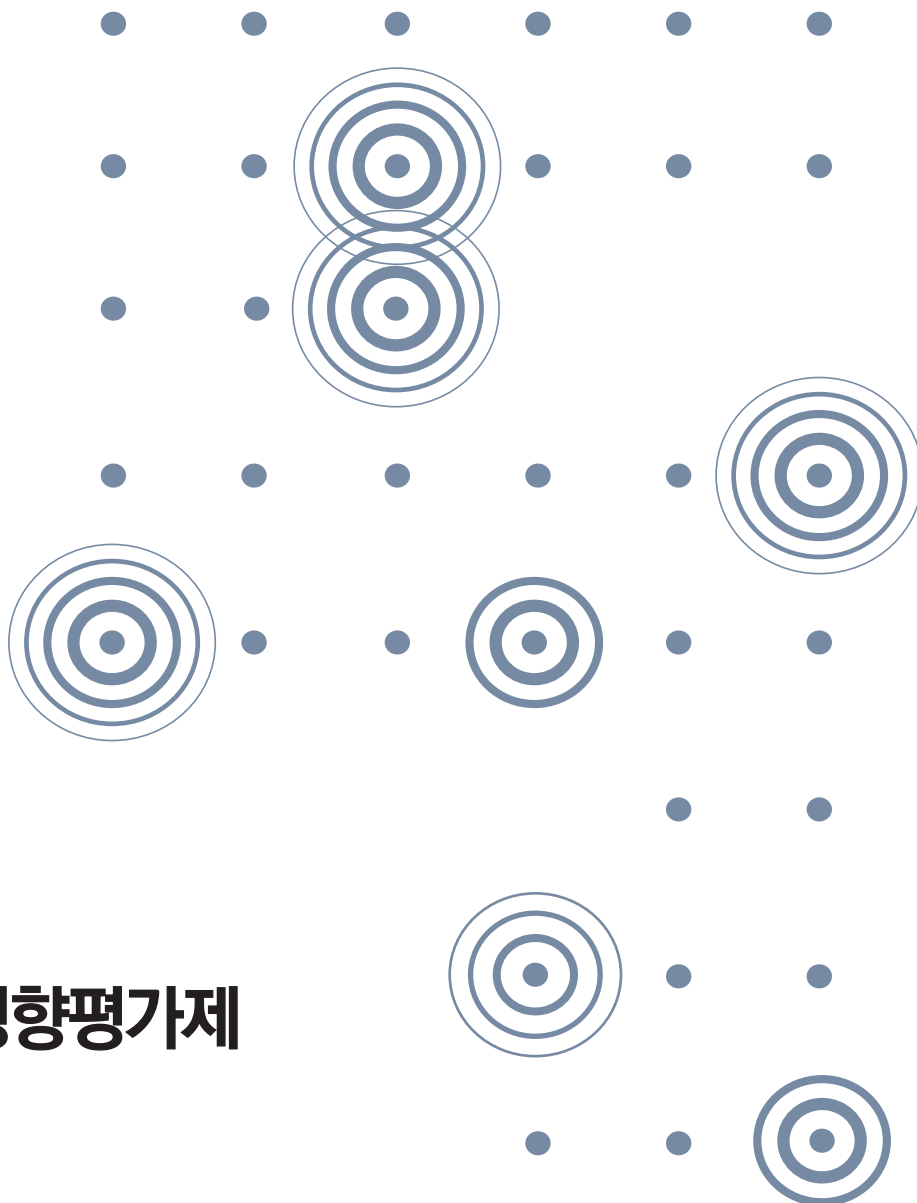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95호 2024. 4. 15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한지혜

부연구위원

이가인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제395호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발행인 오 균

편집인 이신해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4년 4월 15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한지혜 부연구위원  
02-2149-1033  
jhhan@si.re.kr

이가인 연구원  
02-2149-1035  
gainlee@si.re.kr

요약	3
I.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배경과 필요성	4
II.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운영 방향	6
III. 운영 쟁점과 대안	7
IV.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운영(안)	12
V.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17

## 요약

서울시는 시 주요 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변성이 큰 선언적 도시정책(시 주요 계획의 내용)이 미정립 가치(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계획 추진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우선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 검토·협의 → 확정'의 절차를 반복하며 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②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③ 평가를 진행하는 3단계 방식으로 시범평가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내실화한 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서울시,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조정기능을 담당할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모색

최근 들어, 실제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균형발전정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부서가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내재화하고 균형발전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계획(안)을 스스로 사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4개 평가항목을 검토하며 결정한 균형발전 의사를 기록하는 제도여야

도입 배경 및 운영 목적을 고려하면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서울시에서 수립 또는 승인하는 5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핵심과제에 대하여 정책효과 균형성, 저발전지역 촉진성, 균형발전 기여도, 균형발전정책 시너지효과 등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사회적으로, 또 서울시 내부적으로 개념 정립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치이므로 구체적인 수치 변화 예측 등 정량적 기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보다는, 계획의 수립부터 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균형발전 가치 관련 의사결정을 기록(ROD, Record of Decision)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 도입 전 우선 시범평가를 시행하며 서울 지역균형발전 개념 구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해야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범평가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평가 대상계획 여부 검토 및 선정, ② 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및 검토, ③ 평가서 작성 및 계획내용 조정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하며, 단계마다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스스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평가 관리부서 및 전문가의 검토·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결론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체크리스트상 확인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의 엄격성 및 강제성, 절차 간소화 필요성, 균형발전이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

## I.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배경과 필요성

### I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새로운 종합 틀 마련

####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 및 5개년 계획 수립

- '18년 7월, '0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
  - 기존 조례는 서울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16년 6월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효용성 소멸
  - 이에, 폐지까지 논의되다가, 지역균형발전 가치가 서울시 수립 또는 승인 계획과 주요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전면 개정
- '22년 11월에는 개정된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22년부터 '26년까지의 구체적인 균형발전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 정책 의사결정 단계별로 균형발전 조정기능 도입 추진

- ①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② 균형발전 현황 및 성과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 (정책계획단계) 시 주요 계획들에 대한 사전검토제도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예방
  - (정책실행 및 점검단계) 균형발전 현황지표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서울시 지역불균형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균형발전 현황지표: 지역의 발전정도, 잠재역량,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 여건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지표
  - (정책평가단계) 균형발전평가모델, 즉 균형발전 성과지표를 활용해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관리
    - 균형발전 성과지표: 지역균형발전 이행과제 정책성과에 따른 지역 불균형 완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I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균형발전 제도로써 도입 및 운영 유의미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균형발전정책 확대 기초에 선도 대응 필요

- 최근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광역지자체 차원의 균형발전정책 필요성 강화
  - 국토 차원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실제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상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다층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필요성 증가
  - 이에, 서울을 포함한 여러 광역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
-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이 시점에 필요한 선도적 대응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한계 보완 필요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단위와 분야의 균형발전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 필요
  - 서울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경제적 기회, 도시 서비스 등에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서울 지역균형발전 목표
    -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 및 기회 균등화를 통해 지역 역량 또는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
  - 하지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향후 5년간 일자리 및 인프라 분야에 국한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강남·북 간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
    - ‘지역균형 노력에도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산업·일자리, 생활SOC, 교통, 주거환경, 교육 등 5대 분야에 한정하여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를 제시
  - 안전, 환경, 시민참여·공동체 분야 등 또한 서울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분야이며, 강남·북 지역 간뿐만 아니라 서울 5대 생활권역 사이의 격차도 해소 필요

### 국가 균형발전영향평가 사문화 이후 유일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 ‘지자체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일한 제도로 도입 및 운영 가치 상당
  - 해외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가 시행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유일하게 국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한 한국에서도 3년(’05~’07년) 동안만 짧게 운영
    - 국가 균형발전영향평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하여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목표 실행계획 및 달성도, 균형발전 기여도 등 3개 항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

## II.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운영 방향

### I 정책계획의 균형발전 가치 반영 여부 및 정책 부합성 사전 점검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성격: 사전정책조정제도

- 의사결정의 앞 단계에서 사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위 수준의 정책 수단(계획)을 서울시 균형발전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 담당
  - ‘영향평가’라 명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로 운영 미필요
  - 제도 운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도의 핵심 주체, 제도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현실적 한계와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방향 설정 필요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논의가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요 계획에 대한 균형발전 사전검토제도를 구축한다’는 데서 출발하였으므로 무엇보다 ‘사전정책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구상 필요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운영 목적: 지역균형발전 가치 내재화와 정책 실행력 제고

- 서울시 모든 정책의 계획단계에 균형발전 가치를 내재화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
  - (균형발전 가치 내재화)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되, 정책의 기대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해집단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저발전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sup>1)</sup>
    - ‘공간과 사람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지역균형발전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방향<sup>2)</sup>
  - (균형발전정책 실행력 제고)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지표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되는 제도로 기능 필요
    - 개별 영역에서 추진되던 균형발전 시책들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변화의 핵심
    -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서울 균형발전 현황 및 성과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운영’이란 3대 균형발전정책 기반의 상호 간 환류 작용을 통해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 향상을 담보

1) 한지혜·이기인(202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가치 및 핵심이행과제 재정립 연구」, 서울연구원, pp.6~7.

2) 서울균형발전포털(<http://uri.seoul.go.kr/>).

### Ⅲ. 운영 쟁점과 대안

#### Ⅰ 평가 관리부서의 행·재정적 권한 고려해 현실적 운영 방향 설정

**평가대상: 서울시 주요 중장기 계획을 평가하고 평가 전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쟁점]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운영의 적합성과 평가대상 확정 필요성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관리(예정)부서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등의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로 '물리적 사업의 허가 및 승인을 위한 사전영향평가'에 익숙
  - 때문에,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가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다르게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적합성이 가장 큰 쟁점
  - 또한, 평가대상인 '계획'의 종합적·추상적 성격을 고려해 일부 주요 영향평가와 같이 계획별로 평가대상 여부를 계획 수립 시마다 결정할지, 절차의 단순화를 위해 평가 대상계획을 목록화 및 규정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할지 결정 필요
- 균형발전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고려되도록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제도로 우선 운영
  - 서울시 정책 전반에 균형발전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중인 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주요 운영 목적
  - 정책, 사업 등이 서울시 균형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지 않음
  -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개선·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은 평가방식보다는 양성평등 및 공중보건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 같은 평가방식이 적합
- '24년도 시범운영을 위해 우선 계획별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평가대상 여부를 확정
  - 평가대상을 법률 및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목록화하면 평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평가서 작성 담당부서의 평가 사전 대비와 평가관리 부서의 업무 간소화·정례화 가능
  - 하지만, 현재 사실상 모든 계획이 평가대상 규정 근거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지역균형발전 시책 필요 계획으로 명기
  - 광범위한 검토로 평가 절차가 장기화되고 평가 관계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계획별로 평가 전 평가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스크리닝, screening)으로 평가대상 선정
- 시범운영 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계획은 평가에서 제외
  - 서울시 주요 중장기 계획은 주로 5년 및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므로, 5개년 미만의 계획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획의 실행으로 지역 또는 이해집단 간에 다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거나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 ‘다른 영향’이 각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차이’인지, 서울시 도시경쟁력 또는 서울시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격차’인지를 구별
- 국가적 중요 사항 또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보다 우선하여 실현 또는 달성되어야 하는 가치 또는 목표 등을 위한 계획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국가 및 서울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필요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담당(예정)부서의 업무 범위가 소속 실·국 및 본부의 소관 업무 범위를 넘어 확대 조정되기 쉽지 않으므로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만을 평가대상으로 우선 한정

## 평가수준: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자체 체크리스트

- [쟁점] 평가서 작성 주체와 평가서 내용의 구체성
  - 외부 공개는 물론 타 부서로의 공유도 제한적인 승인 전 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평가 주체로 참여 필요
  - 한편, 평가의 수준이 심층적일수록 요구되는 계획 분야 및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 평가서 내용의 방대성 및 구체성 등이 증가해 자체적 평가 가능성 및 타당성 감소
  -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자체평가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평가 행위의 수월성, 평가 절차의 효율성 등이 있으면서 타당성·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가 도출될 적정 평가수준 모색 필요
- 운영 목적, 평가단위,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 및 기법 등을 종합하면 자체 체크리스트가 적합
  - 평가목적, 계획내용에 적합한 평가방식 등에 따라 신속형, 일반형, 심층형 등의 평가방식을 선택 또는 혼용해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평가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 평가서 작성 의무를 부여
  - 평가서 작성에 전문지식,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의 등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전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력·시간 비용이 요구되면 자체평가가 불가능하단 사실도 고려 필요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크리스트가 가장 적합
    - 균형발전 영향을 실질적으로 가늠하기보다는 서울시 정책에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내재화 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평가 목적이 있다는 점
    - 평가 대상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핵심과제 중심의 평가가 적합하다는 점
    - 1·2차 통계자료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방식이 실현 가능성 있다는 점

## 평가단위: 대상계획의 핵심과제

- [쟁점] 핵심과제 선정의 필요성과 자의성 허용 범위
  - 계획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대응하려는 중점 문제가 다르며, 제안 또는 선언하는 내용의 수준이 사업에서 전략, 또는 비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 균형발전 가치를 서울시 모든 정책에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균형발전 가치의 위상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될 정도로 높지 않은 상황
  - 평가대상이 계획이기는 하나, 계획(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평가 주체 또는 관계자가 검토하고 평가하기에는 물리적 한계 존재
  - 이에, 평가의 중점 대상이 될 핵심과제를 계획마다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을 최선 대안으로 두고 적합성 검토 필요
  - 또한, 아직 행·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제도가 작동하려면 평가 주체의 자유재량이 일정 수준 용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의성 허용 범위 논의 필요
- 실질적인 평가서 작성은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평가절차 중에 적어도 한번 계획 전반 검토
  - 평가서 작성 전 관계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계획의 핵심과제 3개 이내로 구체화(스코핑, scoping)함으로써 평가 관계자들에게 계획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만 진행
    - 계획을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 대부분이 평가항목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계획내용에 한정해 평가서를 작성
    - 대신, 평가서에 계획의 요약문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평가서 작성 전 관계자 간 중점 검토 내용 협의 과정에서 계획 전문을 살펴보는 등 적어도 한 번은 계획 전반의 내용을 검토
  - 이를 통해,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에 실익 있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가능
  - 동시에, 핵심과제 선정 시 평가 관리부서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평가서 작성자에게 평가범위 설정의 자의성을 허용해 발생하는 실효성 저하 문제 일정 수준 완화 가능

## 평가지표: 정량평가 한계 고려해 1·2차 자료 활용한 정성기법 적용하고 계획마다 평가지표 선별

- [쟁점] 정량적 평가의 현실 가능성과 측정 필요 지표
  -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 가치 판단의 개입 최소화 필요
  - 하지만, 균형발전 가치에 대한 사회적 또는 서울시 내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균형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논의와 구축이 이제야 진행 중
  -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또는 평가방식 모색 필요

- 판단의 근거를 특정 지표를 바탕으로 기술하되 1·2차 자료를 활용해 변화 예상 방향을 제시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반드시 시행되지 않아도 되는 선언적 도시 정책이 미정립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평가로 정량적 기법 적용 제한적
    - 서울시 수립 및 승인 중장기 계획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으로 계획서가 작성되고 정량적 평가가 수월한 사업 단위까지 구상된 경우는 소수
    - 이처럼 선언적 내용 위주로 작성된 계획의 경우, 계획내용 변경의 가능성, 계획내용 변경 및 미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편
    - 균형발전은 개념 정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치로 계획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지표의 변화를 타당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예측 모델 비존재
- 평가 시행 전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핵심과제의 영향을 예측할 지표를 선정해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범위를 확정
  - 평가 대상계획마다 주요 분야, 수립 주기, 포함 정책 성격 등이 달라 균형발전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상이
  - 즉, 평가항목 측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작성, 긴요하지 않은 배경자료 및 문서 추적 등 비효율 발생 가능성 상당
  - 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 계획의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사항과 평가지표 및 방법을 결정하는 스코핑을 실시해 평가서 작성 기간 단축과 질적 향상 등 도모

## 평가시점: 계획수립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획 승인 공청회 전 평가 절차 완료

- [쟁점] 평가 실효성과 평가 절차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 평가 시점
  - 평가 결과가 계획(안) 내용의 수정 및 변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용의 수정 및 변경이 제한되는 최종 계획(안) 마련 시점 전 또는 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평가 진행 필요
  - 한편, 평가 주체 및 관계자의 업무 부담과 평가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절차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평가 진행 및 완료 필요
- 계획 승인 공청회 개최 전 균형발전영향평가 완료
  - 균형발전영향평가 대상인 서울시 수립 및 승인 중장기 계획은 승인 전에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이후에는 계획내용 변경이 어려우므로 균형발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지를 위해 계획 승인 공청회 개최 전 균형발전영향평가 완료 필요
  - 계획별로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공청회 개최 전에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계획서 제출 시 계획수립 소관부서-평가 관리부서 간 평가서 최종 제출 시점 협의

○ 계획(안) 수립과 함께 평가 진행

- 계획서 초안 마련 후 평가 시행 시, 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돼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계획 변경(재검토)이 쉽지 않은 상황
- 지역균형발전 가치 내재화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실행력 제고라는 제도 운영 목적 달성에 계획 수립과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ROD 차원의 접근이 더 적합
  - ROD(Record of Decision): 계획 수립, 평가 등 특정 행위를 위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의 경위와 근거를 기록해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확대

**구속력 및 실효성: 평가 관리부서의 행정권한 강화하고 관계자의 균형발전 및 제도 이해도 제고**

○ [쟁점] 평가의 실효성과 관계자의 평가 참여도를 증진할 행정 수단 모색

- ‘과연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 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가 여러 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마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 상당
- 지역 불균형 문제보다 다른 도시문제가 더 중시되고 있는 현 서울시 정책환경 속에서는 조례 개정 등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기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평가 관리부서의 행정적 권한 강화

- 평가 관리부서가 평가 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강력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인 예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해 재정권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제한적
- 단시일 내/시범운영 시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 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기반 마련
  - 평가 대상계획의 수립 용역 발주 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행을 고려한 계획(안) 마련’을 과업지시서상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 수립
  -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추적하여 평가 관리부서의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

○ 평가서 작성부서의 균형발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자체평가란 점에서 평가의 실효성은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균형발전 개념 및 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크게 변화
- 이에, 균형발전영향평가 운영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절차 및 행위의 필요성과 시행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균형발전영향평가 지침서를 제시
-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평가단계마다 자문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영향평가 전문가 풀과 전담센터 마련
- 추상적 개념인 균형발전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며 균형발전영향평가 관계자 간 개념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 대상 균형발전 교육 등 시행

## Ⅳ.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운영(안)

### Ⅰ 균형발전 가치 내재화와 정책 실행력 위해 4대 기능 수행

####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 위해 ‘정책효과 균형성’과 ‘저발전지역 촉진성’ 평가

-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한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도록 정책효과 균형성과 저발전지역 촉진성 검토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모든 서울 지역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 도모 필요
  - 단, 이처럼 서울시민의 도시 서비스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를 수반
    - (균형발전영향평가 기능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되, 정책의 기대효과가 특정 지역 또는 이해집단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 (균형발전영향평가 기능②) 상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

#### 균형발전정책 실행력 제고 위해 ‘균형발전 기여도’와 ‘균형발전정책 시너지효과’ 평가

- 5개년 계획 및 성과지표와 환류되도록 균형발전 기여도와 균형발전정책 시너지효과 검토
  - 두 가지 균형발전정책 실행력 제고 기반을 적극 활용해 계획 중인 정책이 균형발전 성과에 기여하고 중점 추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 (균형발전영향평가 기능③)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실행 및 성과 관리를 위해 개발한 서울시 균형발전 성과지표의 개선에 기여
    - (균형발전영향평가 기능④)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기반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해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와의 시너지를 우선 고려

[표 1]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정책효과 균형성	당해 과제로 인한 기대효과가 하나 이상의 지역이나 이해집단에 파급되는가, 또는 특정 지역 또는 이해집단에 집중되지 아니한가
저발전지역 촉진성	당해 과제가 저발전지역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균형발전 기여도	당해 과제가 균형발전 성과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가
균형발전정책 시너지효과	당해 과제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I 계획수립자가 균형발전 가치를 스스로 반영하는 사전정책조정제도

### 제도의 성격①: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균형발전 가치 반영 및 정책 실행력 제고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 조정
  - 공간, 사람,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친 서울시민의 삶 속 불균형 예방 및 해소에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서울시 수립 및 승인이 필요한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설정
  - 계획의 효과나 성과가 아닌 수립 중인 계획의 내용을 평가

### 제도의 성격②: 자체평가

-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계획의 내용을 계획 승인 공청회 전 계획수립 과정에서 직접 평가
  - 제도 도입 및 운영 목적과 평가자 특성을 고려해 체크리스트 수준의 자체평가로 운영
  - 단, 평가 과정에 관련 분야 전문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담당부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평가서 작성계획서<sup>3)</sup>’ 및 ‘균형발전영향 평가서<sup>4)</sup>’ 작성을 지원

3)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4].

4)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6].

## I 평가단계①: 평가 대상계획 여부 검토 및 선정

### 지원조례상 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필요 계획과 5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 중 평가대상을 선정

#### ○ 평가대상 선정 방법:

- 계획수립 소관부서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평가대상 여부 체크리스트<sup>5)</sup>’를 작성하여 평가 관리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전, 계획안 중간보고 전, 계획안 초안에 대한 부서 협의 전 등
- 평가 관리부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의 ‘체크리스트 검토 의견서<sup>6)</sup>’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여부 확정
- 원칙적으로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균형발전영향평가 미대상 계획임을 소명
- 계획수립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판단하는 경우, 평가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생략 가능

#### ○ 평가대상 선정 기준:

- (작성제외요건) 지역 또는 이해집단 간에 다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부재한 경우, 5개년 미만의 계획, 지역균형발전 외 실현/달성이 필요한 가치/목표 등을 위한 계획, 또는 기반 시설 신설/개설이 수반되지 않는 콘텐츠 중심의 계획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작성생략요건) 상위 또는 후속 계획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계획은 평가 생략

5)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2]

6)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3].

## I 평가단계②: 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및 검토

### 향후 중점 평가가 진행될 계획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평가지표 설정

- 핵심과제 및 평가지표 선정 방법:
  - 계획수립 소관부서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평가서 작성계획서<sup>7)</sup>’를 작성하여 평가 관리부서에 제출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전, 계획안 중간보고 전, 계획안 초안에 대한 부서 협의 전 등
  - 평가 관리부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의 ‘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의견서<sup>8)</sup>’를 참고하여 중점 평가가 이루어질 핵심과제와 평가지표를 확정
- 핵심과제 및 평가지표 선정 기준:
  - (핵심과제 선정 기준) 계획의 주요 과제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균형 발전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 평가의 목적과 평가항목을 고려해 핵심과제의 수와 내용적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
    - 계획마다 핵심과제의 적정 범위(핵심과제의 내용적 범위, 예산 투입 규모 판단 기준, 균형 발전 연관성 판단 기준 등)가 다르므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율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
    - 균형발전 영향 사전검토제도로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평가에 실익이 있도록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핵심과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 허용
  - (평가지표 선정 기준) 각 핵심과제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적합한 지표를 선정
    - 평가항목별 지표를 계획수립 소관부서-관련 분야 전문가(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평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이때, 평가항목에 포함된 ‘지역’, ‘이해집단’, ‘저발전지역’, ‘균형발전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 주요 개념의 범위와 내용을 관계자 간 조율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
    - 균형발전 가치 측정 및 예측의 어려움과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임을 고려해 지표 측정 시에 구체적인 수치 변화 예측 등 정량적 기법 미적용
    - 대신, 유사 사업의 성과 등 1·2차 자료를 활용해 변화 예상 방향을 제시

7)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4].

8)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5].



## I 평가단계③: 평가서 작성 및 계획내용 조정

### 협의된 평가서 작성계획서에 따라 핵심과제별로 평가서를 작성·검토하고 계획내용 조정

- 균형발전영향 평가방법:
  - 계획수립 소관부서는 자체적으로 평가 대상계획의 내용을 평가서 작성계획서에 따라 검토하여 4개 평가항목에 대한 답변과 향후 조치계획, 즉 ‘균형발전영향 평가서<sup>9)</sup>’를 작성
    - 하나의 핵심과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만족해야 하며, 불만족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또는 미조치 사유를 기재
  - 평가 관리부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의 ‘평가서 검토의견서<sup>10)</sup>’를 참고하여 평가 결과 및 조정 필요 사항을 재확인
- 평가결과 반영 및 사후관리 방법:
  - 평가 관리부서는 필요시 추가 조치 필요사항을 계획수립 소관부서와 공유하고 조율
  - 평가 완료 이후 평가 결과 반영 및 계획내용 변경 여부, 평가서에 제시한 조치사항의 실제적 이행 여부 등을 추적
    - 평가서 작성 충실도, 조치사항 실제 이행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항목 만족 정도에 따라 평가 대상계획을 등급화하여 관리

9)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6].

10) 한지혜·이가인(2023),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표 4-7].

## V.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I 제도 운영과 안착에 활성화 및 내실화 노력 필요

####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평가 참여도와 이해도를 증진해 평가 실효성 강화

- 법적 기반, 협의회 등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참여도 및 이해도 증진 기반 마련 필요
  - 시범운영(안)은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및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자체평가에 해당하므로,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평가에 대한 참여도 및 이해도에 따라 평가 실효성 크게 변화
  -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계획수립 소관부서나 평가 관리부서와 일련의 평가 절차를 함께하며 자문 및 지원 역할을 할 전문가집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 시범 평가로 내실화한 후 제도를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개선

- 시범 평가로 물꼬를 트고,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개선 필요
  - '24년 시범 평가 추진을 목표로 현실적 여건 및 서울시 내부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부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시범운영(안) 고안
  -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 평가를 하며 평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례의 개정 또는 신설을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세부 지침서 마련 필요
  - 제도 도입 이후에는 계획별 균형발전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결과, 협의·평가 결과 등을 축적하며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하고 정량적 평가 및 평가 사후관리 기반 마련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활성화	균형발전영향평가 참여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li> <li>- 균형발전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 시행 방침 전달</li> <li>- 평가 후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 관리부서의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로 활용</li> </ul>
	균형발전영향평가 이해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역할을 하며 평가를 지원할 (가칭)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 조직 및 운영</li> <li>- 균형발전영향평가 전담 센터 구성 및 운영</li> <li>-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지침서 제시</li> <li>- 서울시 공무원 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 주기적 실시</li> </ul>
내실화	제도 도입 전 시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계획에 대한 시범평가로 평가서 서식 작성 요령 또는 세부 지침서 마련</li> <li>-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개정 또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조례 신설 검토</li> <li>- 서울시 내부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수렴</li> </ul>
	제도 도입 후 단계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대상계획 확정 및 조정 체계 마련</li> <li>- 정량지표 구축 및 검증으로 정량적 기법 활용도 제고</li> <li>-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의 행·재정적 권한 강화</li> </ul>

## I 평가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 참여도 및 이해도 증진

### 지원조례의 개정과 (가칭)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은 평가 본격화 전 추진 필수적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
  - 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계획 승인 공청회 전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완료하도록 법적 구속력 마련(평가 미수행 시 공청회 등 이후 승인 절차 지연)
- 검토 및 자문 역할할 범학제적 전문가를, (가칭)균형발전영향평가 협의회 조직 및 운영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는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로 운영되므로 평가의 타당성 확보에 2차 검토 등 지원 필요
  - 이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검토 및 자문, 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 및 자문, 균형발전영향 평가서 검토 및 조치사항 제안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할 협의회 조직
  - 평가 대상계획별로 분야 및 내용에 맞춰 TF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협의회 운영
    - TF 구성원: 평가 대상계획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서울시 균형발전영향평가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계획과 관련성 높은 분야의 전문가, 국가 및 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 등

### 더불어 계획수립 소관부서의 평가 참여도와 이해도를 증진할 다양한 행정 수단 적용

- 평가 참여도 증진 방안:
  - 계획수립용역 과업내용서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내용구성을 포함토록 계획수립 소관부서에 방침 전달
  - 검토의견,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평가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 관리부서의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로 활용
- 평가 이해도 증진 방안:
  - 일관성 있는 평가서 검토 및 자문, 장기적인 평가 행위 추적 및 관련 자료 축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의견 상충 시 적합 대안 모색 등이 가능한 전담 센터((가칭)균형발전영향평가 센터)를 운영
  -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지침서를 제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가치, 균형발전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서울시 공무원 대상 전문가 초빙 교육 주기적 실시

## I 엄밀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위해 단계적 제도 개선

### 제도 도입 전: 시범평가 시행으로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안) 내실화

- 수립 및 승인 예정인 서울시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해 엄격성, 강제력 등 평가의 적정 수준을 모색하고 서식 작성 요령 또는 세부 지침서 마련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운영(안)은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위한 평가로, 각 서식에서 관련자들이 답변해야 하는 항목들 모두 모호성 내재
  - 때문에, 시범평가를 시행하여 가능한 한 구체성을 확보해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업무 피로도 등 최소화 필요
- 시범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거 조항을 지원조례에 우선 마련하고, 시범평가 후 조례를 추가 개정하거나 필요시 '(가칭)서울특별시 균형발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신설
  - 법적 근거 없이 시범평가를 시행할 시 시범평가 대상계획 소관부서의 자발적 협조 필수
- 시범평가 과정에서 부서 간 간담회, 평가 절차 및 방법 교육, 관련자 의견조사 등 필요
  - 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운영 그리고 안착에 서울시 내부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수렴 중요

### 제도 도입 후 ①: 평가 대상계획 확정 및 조정 체계 마련

- 스크리닝 및 티어링을 시행하며 축적된 계획별 균형발전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계획 조정 및 목록화
  - 평가 대상계획 명시 위해 별도의 검토 및 합의 과정이 필요하나, 신뢰성 있는 검토 및 합의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연 우려
  - 이에, 평가 대상계획을 선정(스크리닝)하고 평가를 생략할 계획을 구분(티어링, tiering)하는 단계를 도입해 시범평가 및 제도 운영을 우선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평가 대상계획을 규정
  - 단, 일정 주기마다 서울시 주요 계획의 균형발전영향평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평가 대상계획을 조정하는 체계를 함께 마련
- 평가 관리부서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평가 제외 계획으로 규정한 '기반시설 신설/개선 수반 없는 콘텐츠 중심 계획'도 평가 대상계획으로 포괄되도록 평가대상 범위 확대
  -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운영 목적이 서울시 모든 정책에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내재화 하는 것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정책과 소프트웨어 정책 모두에 대한 균형발전 영향 사전검토제도로 기능 확대

### 제도 도입 후 ②: 정량지표 구축 및 검증으로 정량적 기법 활용도 제고

- 평가 시행을 통해 축적된 협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당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기반 마련
  - 균형발전영향평가가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함께 적용되는 평가로 발전 필요

### 제도 도입 후 ③: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의 행·재정적 권한 강화

- 평가 결과 마련된 조치계획 및 의견이 실제로 계획내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평가 사후관리 기반 마련 필요
  - 계획내용 변경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 이를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 관리부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주체 변경, (가칭)균형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등 재정권 부여 방안 모색 필요
  - 평가 관리부서의 재정권이 확보되면,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로도 위상 확대 가능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